

"영유아 보육법 현실성 없다"

91.11.9

한국여성노동자회 토론회서 지적

영유아보육법이 지난 8월 완비됐지만 취업여성의 탁아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직장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이의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한국여성노동자회(회장 한명희)가 개최한 '직장탁아소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토론회에는 직장탁아소 설치 확대방안 및 직장탁아소의 필요성과 현황, 영·유아보육법의 제정의의와 문제점 등이 활발히 논의됐다.

이날 조민수씨(전국노동조

합협의회 여성국 간사)는 '직장탁아소 설치 확대방안'에 대해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규모는 여성노동자 1백 50명 이상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육아책임은 부모모두에게 해당되므로 굳이 여성노동자만을 기준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에따른 △모든 공단지역, 공장밀집지역에 공단탁아소를 설치 △사원주택이나 영구임대아파트 등 노동자 주거밀집지역에 탁아소 설치 △저소득층을 위한 국·공립탁아소 설치 확대 △직장탁아소가 없을 경우 기업주는 탁아비용 지원 △중소기업의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 △사회공공기관, 특히 학교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등을 제안했다.

이경자씨(인천여성노동자회 사무국장)는 '직장탁아소 필요성 및 현황'에 대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지난 70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고 기혼여성이 전체 여성노동자의 25.5%를 차지하고 있어 탁아소의 설치치가 매우 시급하다"고 전제, "저소득층 맞벌이부부의 경우 탁아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아이들을 집안에 방치하고 일을 나갈 수 밖에 없어 아이들이 부모가 없는 사이 화재로 질식사한 것과 같은 사건이 되풀이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성개발원의 조사에 의하면 빈민층 취업여성의 56.25%가 일을 나갈때 자녀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부모가 일나가는 동안 방치되는 아이들은 각종 사고

와 위험에 놓여져 있고 특히 잠긴 방안에서 혼자 갇혀있는 아이는 자폐증이나 후천적 저능아, 지진아가 될 우려가 많다"며 "여성의 취업을 가로막는 자녀양육문제는 더 이상 개인적 문제로 내 버려둘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탁아정책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최현숙(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부회장)는 '영유아 보육법의 제정의의 및 문제점'에 대해 "직장탁아소를 설치하기 위한 근거는 마련됐으나 현실성 없다"면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할 사업장은 당초 1천명 이상, 여성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으로부터 5백명선으로 조정됐지만 많은 기혼여성이 취업한 영세한 사업장을 제외하고 있고, 사업주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91년 6월말 현재 직장보육시설은 18개소이며 여성노동자가 몰려있는 공단 탁아시설로는 전국 78개 공단중 구로동 한국수출산업공단 부설 새마을 유아원 1개소만이 있을 뿐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보사부에 따르면 90년 탁아수요아동은 1백8만6천명에 이르며 이중 저소득층 아동이 13만1천명, 일반아동이 95만5천명이다.

정부는 92년중 직장탁아시설 1백53개소를 비롯해 총 5천3백 51개소를 설치할 계획이지만 이는 탁아수요의 10.6%를 해결하는데 지나지 않는 형편에 있다.